

국민후보와 독자정당건설에 대한 소고

정영태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번 대선에서 지지할 후보를 누구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노동계가 진통을 겪고 있다. '국민승리 21'(가칭) 국민후보추천위원회에서 권영길 민주노총 위원장을 국민후보로 추천할 것을 결정했고, 9월 5일 개최된 민주노총의 임시대의원대회는 이를 승인했다. 그러나 향후 노동자의 정치적 단결을 만들어내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상당한 노력이 요구될 것이다.

조합원의 60%가 독자정당 요구

다른 나라의 경험이나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노동자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또한 결국 이루어질 것이다. 노동자 민중의 독자정당에 대한 필요성은 무엇보다도, 우리 정당정치의 현실에 의해 강제되고 있다. 노동자나 학생 또는 농민 등 소위 말하는 기층대중을 위한 정책을 추구해봐야 선거

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기존 정당들은 보수화경쟁에 열중하고, 때로는 반노동자 반민중적인 정책과 행동을 스스로 없이 자행하기도 한다. 또한 보수정당들은 여야의 구분 없이 노동자들이 노동자로서 행동하기보다는 일반시민으로서만 사고하고 행동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그것도 부족해서 출신지역에 따라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고 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은 이들이 일반국민은 물론 당원들조차 동원과 조작의 대상으로만 취급할 뿐 정당(의 보스)이 결정한 후보를 찍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문제 이외에 어떠한 참여의 기회도 주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정당들이 노동자의 이익을 제대로 대변하리라고 믿는 노동자는 별로 없다. 한국선거연구회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노동자 중 지지정당이 없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92년의 27%에서 95년의 40%로 올랐고, 96년 총선 무렵에는 그 비율은 다시 48%로 올라갔다. 이처럼 기존 정당에 대

한 노동자들의 불신이 점차로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표1>에서 보듯이, 89년 이후 극히 최근까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거의 모든 설문조사에서 최소한 60%가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할 새로운 정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기존 정당들의 행태나 노동자들의 인식에 비추어 볼 때,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노동자와 민중(또는 국민)의 독자정당을 건설하는 것을 중장기적인 목표로 내세운 것과, 민주노총이 국민후보전술을 채택한 것은 지극히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후보를 둘러싸고 간부나 조합원간에 입장 차가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사실, 기존 정당에 대한 불신이나 노동자를 위한 정당에 대한 갈망에 있어서 출신지역의 차이는 거의 없다.

앞에서 보았듯이, 점차로 많은 노동자들이 기존 정당 중 지지할만한 정당이 없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심지어는 호남출신들의 연고정당에 대한 지지도가 점차로 떨어지고 있다. 한국선거연구회의 조사결

과를 한번 더 인용하면, 호남출신의 연고정당에 대한 지지율이 92년 대선 무렵에는 80%에 달했으나, 이후 계속 떨어져 96년 국회의원 선거 무렵에는 57%로 떨어졌다. 이러한 추세는 최근 DJ와 국민회의가 구지배세력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전 노에 대한 무조건 사면은 물론 극우반동적인 인사의 영입도 마다 않는 행태를 보임에 따라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그리고, 갈수록 많은 노동자들이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할 새로운 정당(독자정당)의 출현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이 점에 있어서도 출신지역이 큰 차이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호남출신조차도 70%정도가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친노동자 또는 친노조적인 정책을 공약으로 수용하는 후보를 지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역시 압도적인 다수(77%)가 찬성하고 있다.

왜, 후보전술 지지도는 낮는가

그런데, 지난 5월 민주노총 서울지역본

<표 1> 노동자정당의 필요성

	1989 ¹⁾	1992 ²⁾	1993 ²⁾	1994 ²⁾	1994 ³⁾
반드시 필요	68.7	51.5	60.0	66.3	60.5
당장은 불필요	-	9.8	5.1	3.1	4.2
여건상 어렵다	22.8	29.4	31.0	25.6	28.5
전혀 불필요	7.5	3.4	1.4	1.3	2.6
모르겠다	-	5.9	2.6	3.6	4.2

주: 1) 한국노총, 『한국노동자의식연구』 (1990)

2) 유진호 정영태, 『한국노총과 전노대의 조합원의식 비교연구』, 《사회경제평론》 제8집 (1995)

3) 한국노총, 『한국노동자 정치의식연구 II』 (1994)

부가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제야사민단체와 연대해 민주적 국민후보를 내야 한다'는 주장에 찬성한 조합원은 독자정당건설에 대한 찬성률보다 훨씬 낮은 42.2%에 지나지 않았다. 선국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최근에 실시한 또 다른 조사에 의하면, 아권후보가 단일화(대체로 김대중으로 인식되고 있다)될 경우 그 후보를 지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찬성을 표시한 조합원도 역시 독자정당건설 찬성률보다 낮은 50%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출신지역별로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호남출신 조합원들은 85%가 찬성하지만, 영남출신 조합원들은 31%(부산 경남출신, 반대 37%)에서 49%(대구 경북출신, 반대 25%)만 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노동자의 정치적 단결을 저해하는 직접적인 요인은 노동자들의 지역주의적 행태라고 해야 하는가?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인식할 것이다. 필자도 대체로 동의하는 바다. 그러나, 노동자가 노동자로서 행동하기보다는 특정지역의 구성원으로 행동하려는 경향이 강한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역문제의 심각성이나 (X)의 영향력에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된다. 그것보다는 노동조합운동의 내적 조건을 살펴보아야 한다. 외적 정치환경은 노조의 힘만으로는 바꾸기 어렵지만, 내적 조건은 노조의 힘만으로도 충분히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후보전술에 있어서 노동자의 단결을 저해하는 내적 요인은 무엇일까? 이

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표2>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노조가 독자후보를 내세우는 방안에 찬성하는 응답자는 불과 29%에 지나지 않는다. 노동자를 위한 새로운 정당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별로 보면, 물론 필요성을 느끼는 응답자일수록 독자후보출마에 대해서 찬성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조차도 독자후보출마(34%)보다 다른 방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다. 왜 그럴까? 부분적으로는 기존 정치인 가운데 진노동자적인 후보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기존정당의 공천을 받지 않으면 당선되기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다(<표2> 참조). 그러나, 보다 본질적인 분계는 노조의 정치활동과 노동자출신 정치인에 대한 부정적인 또는 회의적인 태도라 할 수 있다.

최근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노조가 독자정당을 건설하는 것을 반대하는 이들 중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존 정당이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자는 극히 소수(1.9%)이고, 여건이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는 응답자(7.8%)도 역시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이보다 훨씬 많은 응답자(13.3%)들이 노조는 정당정치나 선거에 직접 개입해서는 안되기 때문(10.9%) 또는 노동조합이 정당을 만들거나 노조간부가 정계로 진출하면 기존 정당이나 정치인과 똑같아 될 것이기 때문(2.4%)이라는 이유를 지적하고 있다. 독자정당건설을 찬성하는 이들 중에도 반대자들과 인식을 같이 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다. 왜냐하면, <표3>에서 보듯이, 노조가 직접 정당을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찬성하면서 독자후보를 내는 방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들(40%)도 결코 적지 않기 때문이다. 노조가 정당을 건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면서 독자후보를 내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조합원들은 아마도 독자정당건설 자체에 반대하는 이들과 같은 이유로 독자후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노동계 출신 정치인에 대한 불신

그렇다면, 노조의 정치세력화를 제약하는 법적 제도적 제약을 제외한다면, 노조가 독자후보를 내세우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로서 가장 많이 지적되는 것은 노조가 정당을 건설하거나 선거에 후보를 내세워서는 안된다는 것이고, 다음으로 많이 지적되는 것은 노동계 출신 정치인에 대한 불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노조가 정당을

건설하거나 선거에 후보를 내세우지 말자는 입장을 가진 조합원들을 일반적으로(실리적) 조합주의자라고 한다. 과연 실리적 조합주의자들은 얼마나 노조의 독자후보출마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하는가? 조합주의적 노동운동을 추구하는 이들은 노동조합이 정당건설이나 선거에 직접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노동자들에 비해 더 부정적인 것은 틀림없는 것 같다. 94년 한국노총의 조사결과(<표4>)에 의하면, 노조의 일차적 과제는 정당건설이나 선거참여야 한다는 조합원은 노조가 정당건설에 직접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57%가 찬성한 반면, 임금인상이나 노동시간개선 등 조합원들의 실리향상이어야 한다는 조합원들은 28%만이 찬성하였다. 노조가 후보를 내세워 선거에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도 거의 비슷하고, 앞에서 인용한 극히 최근의 조사결과에 의하더라도 결과는 마찬가지다. 노조는 정치활동이나 체제변혁의 문제를 일차적인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이들은 42%가 독자정당건설에 찬성한 반면, 노조는 조합원들의 실리향상이나 조직

(표 2) 노동조합의 정치활동방식에 대한 인식 (1994년 한국노총 조합원의 경우)

노동자정당 필요성	노조의 정치활동방식					노조의 선거참여방식							
	정당 건설	기관 지시	간접 추진	청원 연대	보통 견역	인원	독자 후보 공천	기초 정당 지시	기초 정당 비교	정재 비교	선거 불참	모름	인원
필요시 필요	40.0	12.2	7.3	33.1	10.3	73.7	34.2	40.0	6.1	6.5	5.0	8.3	743
당장은 불필요	24.5	2.2	6.1	40.8	16.5	49	19.6	23.5	7.0	11.8	11.8	15.7	51
이견상 어렵다	7.3	2.0	9.9	53.2	17.6	34.2	21.1	25.6	10.0	19.4	12.0	11.7	351
전혀 불필요	13.3	10.0	0	36.7	49.0	30	21.3	9.4	3.7	6.3	3.3	28.1	32
잘 모르겠다	10.2	4.1	10.2	24.5	5.0	49	17.6	7.8	3.9	7.8	13.7	49.0	51
지체	28.3	11.8	8.0	37.0	15.0	1,207	23.8	33.1	7.6	10.4	8.3	11.8	1,228

강화 등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에 치중해야 한다는 이들은 불과 26%만이 찬성하고 있다.

〈표 5〉에서 보듯이, 93년 이래로 노조가 일차적으로 수행해야 할 과제로 조합원들의 임금이나 노동시간 등 실리향상의 추구를 들고 있는 노동자들이 절대다수를 이룬 뿐만 아니라, 그 비율이 고정화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단위노조의 경우 더욱 강하다. 최근의 조사결과를 보아도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노동자들의 의식상태는 조직력에서 가장 앞서 가고 현실의 모순으로 말미암아 가장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래서 현실 변화의 주도적 집단이 될 수밖에 없고 또한 되어야 하는 집단이 노동자집단, 그 중에서도 조직된 노동자집단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 실리적 조합주의에 대한 지향성이 강할수록 노조의 정당건설이나 선거참여에 대해서 더 비판적인 것은 틀림없지만, 정치적 조합주의의식이 강한 조합원보다 특별히 더 비판적인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94년 한국노총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독자후보론에

대한 실리적 조합주의자들의 찬성율은 29%로, 정치적 조합주의자의 33%와 거의 같았다.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이념적 지향에 관계없이 모든 조합원들이 독자후보론에 대해서 부정적인 경향이 더 강하다. 따라서, 실리적 조합주의의 자체만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노동자를 정치의 주인으로

필자가 분석한 바로는 노동계의 독자후보에 대한 지지여부는 노동조합의 이념적 지향에 대한 입장파, 임금만족도, 노조의 건의 국가정책에의 반영정도와 기존정당에 대한 인식 등 여타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즉, 임금에 대한 불만이 높을수록, 국가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일수록, 그리고 지지할만한 정당이 없는 경우, 독자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높다. 이러한 분석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국가정책과 기존 정당의 행태에 대한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의, 국가정책과 기존 정당의 반노동자적 성격을 조합원들에게 충실히 전달하고, 동시에 노조가 정치에 직접 개입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를 교육

〈표 3〉 노조정치활동방식과 선거참여방식

정치활동방식	선거참여방식						인원
	독자후보	기존정당공천	기존후보지지	청색비교	신기통합	노르결은	
청년건설	56.0	33.6	2.9	2.2	7	2.6	274
기존성당지지	8.7	73.0	10.8	3.6	2.7	8	111
새연연대	22.2	35.2	14.8	22.2	0	5.6	54
청우건의	23.8	42.5	9.6	2.4	6.7	4.7	190
모르겠음	22.2	22.2	11.1	0	11.1	33.3	5

과 실천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표 4) 노조의 과제별 노조의 정당건설과 독자후보 찬성률

노조의 과제	정당건설	독자후보
실리향상	27.6	29.3
조직강화/확대	23.1	22.0
노동법거정	41.1	36.0
해고자복직	35.0	20.0
정책건의활동	18.2	24.7
정당/선거정치	57.1	33.3

(표 5) 노동조합의 과제

	1993 ¹⁾	1994 ¹⁾	1994 ²⁾
전국조직의 과제			
실리향상	54.6	56.2	63.4
신입민주화	-	9.8	-
경제민주화활동	8.1	3.1	-
노조조직활동	6.4	17.3	8.1
정치활동	2.4	3.4	1.7
정책건의활동	-	-	13.8
노동법개정활동	22.4	-	10.4
해고자복직	2.7	-	1.6
체제번혁활동	3.4	2.5	-
국가경쟁력강화	-	4.7	-
단위노조의 과제			
실리향상	67.0	67.5	-
신입민주화/직장민주화	18.6	8.1	-
경제민주화활동	.5	2.4	-
노조조직활동	-	15.3	-
정치민주화	1.4	.3	-
노동법개정활동	5.7	-	-
해고자복직/노동자관리추구	4.9	-	-
체제번혁활동	1.3	2.0	-
국가경쟁력강화	-	3.4	-

주 1) 송윤호 정연대, 「한국노총과 전노대의 조합원역시 비교연구」, 《사회경제정책연구집》(1995)
 2) 한국노총, 「한국노동자 정치의 식연구」(1994)

후자의 문제와 연관되기도 하고, 앞에서 지적한 정계로 진출한 노조간부에 대한 불신감과 관련된 문제를 간단히 살펴보자. 이미 잘 알고 있듯이, 그간 정계로 진출한 노조간부들은 본의든 아니든 노동자의 요구를 외면하거나 때로는 반노동자적인 행태를 보여 왔다. 이러한 과거경험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노동자들의 불신을 제거하지 못하면, 노동자들은 '국민후보'를 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노동자들의 불신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모든 중요한 결정과정에 조합원들을 직접 참여시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노조간부의 정계진출과 이후 활동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기존 정당과 정치인들이 일반 국민들을 구경꾼으로 남겨 두었던 것처럼, '우리 진영'에서도 그렇게 한다면 노동자들은 무력감과 불신감을 결코 버리지 못할 것이다. 임금문제나 단협문제에 대한 결정과정에 조합원들을 직접 참여시키고 투표도 하게 한다면, 그보다 중요한 정치문제의 결정과정에 노동자들을 직접 참여시키고 투표도 하게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가 아닌가? 후자, 즉 노조간부의 정계진출과 이후 활동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관련해서는 조합원 다수의 동의를 얻을 경우에만 노동자출신이 후보로 나올 수 있게 하는 것과, 당선 이후 반노동자적 행태를 보일 경우 소환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한다. ❖